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 1.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 2.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 3.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 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 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 1.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 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 2.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 3.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 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그림 1. 계엄 해제 시도 시 대응방안 명시>

-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해제 요구'직권 상정 원천 차단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 의원들이'계엄 해제'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당정 협의 제한시,'해제요구'안 직권 상정 차단 방안 검토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그림 2. 계엄군 배치 편성 계획>

< 집회·시위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 >

○ 임무지역별 세부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구 분	부 대	
	광화문 일대(시청, 서울역 등)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	
	용 산 역	20사단 1개 중대	
집회·시위	신 촌 일 대	26사단 1개 대대	
지역 점령	대학로 일대	26사단 1개 대대	
	서울대 일대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국회)	30사단 2개 대대	
주요도로	톨게이트(서서울, 서울, 동서울)	30사단 1개 중대(톨게이트별 1개 소대)	
통 제	한강다리 10개(성산~성수대교)	30사단 1개 대대	
	• 청와대·광화문 등 핵심지역 진입 도로·한강다리 통제		
비고	* 도로통제 : 강변북로(성산~성	(수)-내부순환로-북부·동부간선로 일부	
	* 한강다리 : 성산대교~성수대.	교 구간 10개 다리	

14 ×

<그림 3. 계엄발령시 부대별 기동로>

○ 시설별 세부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ВН	국방부 · 합참	국 회	정부청사	법원 · 검찰
26사단 1개 여단	20사단 1개여단	30사단 1개중대	26사단 1개중대	30사단 1개중대

○ 부대기동

• 시설별 기동로

구 분	이 동 로
ВН	· 양주 → 구파발 → 구기터널
국방부 · 합참	· 양평 → 구리 → 동대문 → 용산
국 회	· 수색 → 강변북로 → 서강대교 → 여의도
정부청사	· 양주 → 구파발 → 구기터널 → 광화문
법원 · 검찰	· 수색 → 강변북로 → 반포대교 → 서초

• 방법: 선발대·본대·후발대로 기동(주이동로: 육상, 보조이롱로: 공중)

<그림 4. 문건 내 NSC 관련 부분>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 O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 보수언론에서 계엄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
- O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內 軍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軍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 O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對美·中·日 사전 교감